

금속노조 “제조업 일자리 위태, 기다릴 여유 없다”

11일 국회 앞 결의대회 ... 노정 교섭·노조법 개정 촉구, 7월 총파업 예고



금속 노동자들이 정부에 제조업 일자리 보호를 위한 노정 교섭을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만 간부 상경 결의대회를 열고 “공급망·일자리 위기 해결을 위해 이재명 정부에 노정 교섭을 제안한다” 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 자리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고, 7월 총파업 승리를 결의했다.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은 “미국 관세 문제 등으로 우리 제조업과 일자리가 위태롭다. 노동자에게는 기다릴 여유가 없다” 라며 “노조법 2·3조 개정도 마찬가지다. 더 미룰 수 없는 당연하고 정당한 요구” 라고 강조했다. 장창열 위원장은 “위기에 처한 노동자들이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7월 16일 파업을 결의했다” 라며 금속노조 7월 총파업을 예고했다.

장창열 노조 위원장은 투쟁사업장 문제도 제기

했다. 장창열 위원장은 “고공농성 500일이 넘는 해고 노동자, 이렇게 살 순 없다며 절규하는 조선소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나중은 없다. 이재명 대통령과 국회는 지금 당장 한국옵티칼, 한화오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고공농성 노동자들을 화상으로 연결해 만나기도 했다. 서울 중구 한화 본사 앞 CCTV 첩탐에 오른 지 89일째인 김형수 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은 “한화오션 원청이 노동조합과의 약속을 어긴 채 계속 노동자들을 우롱한다” 라며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모든 노동자가 노동자 권리를 제대로 누리고 차별받지 않길 바란다” 라고 전했다.

박정혜 구미지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수석부지회장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내 삶은 공중에 매달렸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라며 투쟁 지지와 연대를 호소했다. 이날 박정혜 수석부지회장은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 옥상에서 고공농성 521일째를 맞았다.

금속노조, 고공농성 사업장 문제 해결 촉구 ... “한국지엠·공급망 노동자 함께 구조조정 대응”

이병락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장은 마이클을 잡고 ‘원청 교섭’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병락 지회장은 “진짜 사장인 원청이 하청 노동자

노동조건을 결정하지만, 노조법 한계로 우리는 원청과 교섭할 수 없다”라며 “하청 노동자라는 이유로 노동조합 활동 자체를 통제당하기도 한다”라고 토로했다. 이병락 지회장은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원청 교섭과 하청 노동자 노조할 권리를 쟁취하자고 힘주어 말했다.

한국지엠 사측의 구조조정 통보로 대응 투쟁을 벌이고 있는 안규백 한국지엠지부장이 무대에 올라 “한국지엠이 직영 정비사업소 9곳 운영 중단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한국지엠 노동자와 한국 정부에 대한 외투 자본 지엠의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안규백 지부장은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 납품사, 부품사, 정비망, 판매망 등 한국지엠으로 연결된 모든 노동자와 더 큰 투쟁, 더 넓은 투쟁으로 함께 승리하겠다”라고 결의했다.

민주노총 홍지욱 부위원장은 결의대회 참가자들에게 7월 총파업 조직화를 독려했다. 홍지욱 부위원장은 “금속노조가 어떻게 단결하고 어떻게 투쟁하느냐가 중요하다. 이 자리에 모인 금속노조 확대 간부들이 현장으로 돌아가 이번 총파업을 힘있게 조직해야 민주노총 투쟁이 바로 서고, 노동기본권 쟁취도 타임오프·회계 공시 폐지도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제조업 일자리 위기’ 이재명 정부는 노정 교섭에 나서라 양대노총 제조연대, 정부에 노동 참여 구조 요구 ... “대기업만으로 제조업 붕괴 못 막아”

민주노총 금속노조·화학섬유식품노조, 한국노총 금속노련 등 양대 노총 제조연대는 1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제조업 국내 공급망과 일자리의 붕괴를 막기 위한 노동·정부 간 상설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제조연대는 “재벌·대기업 중심 산업구조가 한계에 다다랐다”며 “지속 가능한 제조업의 미래를 위해 노동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는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국내 일자리의 지속가능성을 산업정책의 중심에 둬야 한다”며 “자동차부품 산업처럼 특정 대기업에만 의존하는 구조는 언제든 무

너질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중간재 수요독점 구조를 바꾸고 노정 교섭으로 해법을 모색할 때”라고 강조했다.

양대노총 제조연대는 기자회견 후 대통령실에 노정 교섭 요구서를 전달했다. 정부에 다음 달 11일까지 공식 회신하라고 요구했다. 제조연대는 “재벌만 잘사는 나라가 아닌, 제조업 기반 전반이 함께 사는 산업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조연대는 요구서에 ▲노동이 참여하는 산업정책 ▲미국 관세 대응책 ▲납품 대금 연동제 강화 ▲공정한 원하청 관계 정립 ▲청년·여성·고령 노동자 일자리 확대 ▲기업의 공급망 인권·환경 책임 강화 등을 담았다.